고위공무원단 내달 출범

■ 변화와 문제점

연공서열·계급 파괴…경쟁체제로

직무 기준·성과 따라 연봉 격차 최대 960만원

부처 위화감·고시출신자 유리·코드인사 우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7월1일부터 전면 도입돼 중앙부처 1~3급 실·국장들 사이의 계급 구분이 없어진다. 이들의 소속도 각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며 근무성적이 나쁘거나 무보직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이후 예상되는 공직사회 변화도를 짚어본다.

◇**계급파괴**=우선 현행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계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구분이 사라진다. 대신 직무의 어려움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류된 '가-나-다-라-마' 5등급의 직무급에 따라 개별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해 자리가 주어지게 된다.

소속도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관리 대상이 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중앙행정기관 1~3급 실·국장급(일반직·별정직·계약직)과 외무직뿐 아니라 부시장·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직무 및 교육파견 공무원이 편입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변화로 연공서열과 계급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 공직사회의 모습이 경쟁체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계급장이나 근무연수 등 연공서열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무엇보다 능력을 검증 받아야 정부의 핵심 보직을 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단제가 고시출신자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많고 경력관리도 잘할 수 있는 고시출신자들이 고위공무원단 진입과정에서 7·9급 출신자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직무기준이나 성과에 따라 연봉 격차 확대**=우선 직무기준에 따라 연봉이 최대 960만원이 차이 난다. 새로 도입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직무의 곤란도, 책임의 정도, 업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보수가 책정된다.

보수체계는 현행 연봉제와 동일하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지만 직무 등급별로 보수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했다.

직무는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나-다-라-마'의 5등급으로 차등화했다.

가장 순위가 높은 '가'의 경우 연간 1천200만원(월 100만원), '나'는 960만원(월 80만원), '다'는 720만원(월 60만원), '라'는 480만원(월 40만원), '마'는 240만 원(월 20만원)이 직무급으로 각각 책정,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현행 전체 연봉대비 1.8% 수준인 성과 연봉 비중을 앞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성과급까지 반영하면 현행 3급 국장 총연봉을 기준으로 최대 1천177만원의 차이가 나게된다.

◇**코드인사 우려**=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살아남기 위한 보직 경쟁이 심화되면 집권세력의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직자가 집권 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기대하는 정치적 요구사항이 자신의 판단과 달라도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등 주요부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부처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을 행자부 소속 공무원들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교류하면서 행자부 고유의 몫으로 생각해 왔지만 앞으로는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고위공무원단 도입 전후비교

구 분	도입 전	도입 후
인사기준	계급	직위
충 원	폐쇄적 임용	개방과 경쟁 확대
성과관리	형식적인 성과관리	직무성과 계약제
보 수	계급제적 연봉제 연봉 차이 미미	직무성과급제
자질, 능력평가	추상적 평가	역량평가제
인사심사	계급단계별 심사 1~3급 채용 및 승진 시마다 중앙인사위 인사심사 실시	진입시만 심사 고위공무원단 진입시(채용 및 고위 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만 심사) 각 부처 인사자율권 확대
신분관리	온정적 신분보장 계급에 따른 안정적, 온정주의	합리적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정년 및 신분보장 제도는 그대로 유지, 성과와 능력 미달자는 적격심사로 인사조치

민주 광주 3·전남 5곳 이상 지역위원장 선임

지역 정치권 초미 관심

광주 남·서구을·광산구 공석

차기 총선 유리 후보 경쟁 치열

민주당이 오는 29일 당직개편에 이어 조만간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선임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임되는 지역위원장은 차기 총선 주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치인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우선 광주의 경우 강운태 전 의원과 신현구 전 위원장의 탈당으로 남구와 서구 을이 공석이며, 광산구도 전갑길 전 의원의 광산구청장 당선으로 자리가 비었다. 광주 북 갑의 경우 김동신 위원장은 고향이 광산구인데다 인구 유입으로 분구 가능성도 높아 광산구로의 이동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이창용 동구 운영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당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도 상당수의 지역위원장들이 기초단체장에 당선됨에 따라 현역 의원들이 맡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로 선임될 전망이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대선과 총선에 대비, 기존의 행정단위가 아닌 선거구 단위로 지역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최소한 3곳, 전남에서 5곳 이상의 지역위원장이 새로이 선임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적어도 7~9군데의 지역위원장이 새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각 지역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다음달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한 뒤 지역 운영위원장에 대한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지는 당직 개편에 이어 조만간 지역위원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선임되는 지역위원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후보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건널목 입체화사업도 지역 차별

호남고속철 79곳중 21곳·경부는 34곳중 25곳 공사완료

민주당 이낙연의원 제기

호남고속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정부의 의지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등이 겹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부고속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대부분 완공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함평·영광) 의원은 26일 열린 상임위에서 질의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건널목 입체화 대상 79곳 가운데 현재까지 21곳만 공사가 완료된데 반해, 경부고속철도는 건널목 입체화 대상 34곳 가운데 25곳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경부선의 경우 남은 9곳의 건널목 입체화 사업 대상 가운데 6곳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호남선은 58곳의 건널목 입체화 대상 가운데 단 한 곳에서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건교부가 호남선의 건널목 입체화 부진 이유와 관련, 총 사업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25%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 부담에 관한 규칙'을 개정, 철도공사나 국가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호남선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필요한 58곳 가운데 48곳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나머지 입체화 사업도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란 건널목에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를 설치,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C방 등록제 고려"

김명곤 문화부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26일 최근 성인전용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업인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도박전용 PC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PC방이 처음에는 도박성 게임이 아니라 청소년 게임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유업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브리오 전염병 아니다"

신일식 강릉대 교수 등 제기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심심찮게 발병하는 비브리오 패혈증을 법정 전염병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신일식 강릉대 교수는 이날 열린 '비브리오 패혈증, 법정 전염병 지정해제를 위한 세미나'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은 여러 특성에 비춰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식중독에 가까운 질병"이라고 말했다.

조영제 부경대 교수도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민물에 넣으면 바로 죽는다"며 "생선회를 조리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장애인협, 시의회에 감사 꽃다발 전달

광주장애인협회 회원들이 26일 광주시의회를 찾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관련 예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준데 대한 감사의 꽃다발을 의원들에게 전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 민선 4대 의회를 마무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